

코스피, 전기전자 질주에 '최대 실적'... 코스닥은 뒷걸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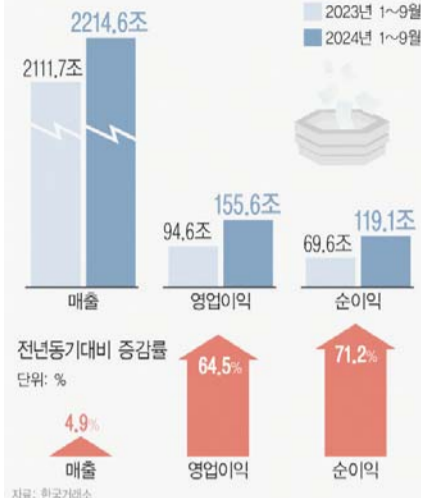
3분기 희비 엇갈린 상장사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64.5% 급증
전기전자 업종, 영업이익 2018% ↑
코스닥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감소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의 희비가 엇갈렸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부문의 선전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코스닥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1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24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사 706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2214조6098억원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4.9% 소폭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155조6463억원, 119조12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4.5%, 71.2%씩 급증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연결 영업이익은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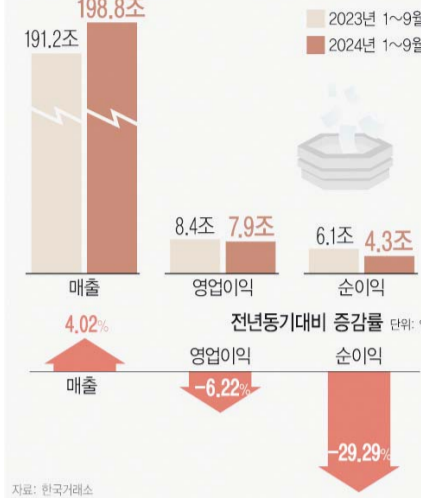
코스피 상장사 3분기 실적



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개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4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증가세를 보였다. 연결 매출액은 3.59% 소폭 오르고, 영업이익(42.36%)과 순이익(52.93%)은 전년 대비

코스닥 상장사 3분기 실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코스피 연결매출액 비중은 10.2%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 17개 업종 중 전기전자, 운수창고업 등 12개 업종이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 비금속광물(-2.98%) 등 5개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기전자(2018.48%), 전

기가사업(흑자전환) 등 9개 업종이 증가하고, 철강금속(-37.12), 기계(-22.01%) 등 8개 업종이 감소했다. 순이익도 전기전자(648.64%), 전기기가사업(흑자전환) 등 9개 업종이 오르고, 화학(-44.22%), 기계(-39.82%) 등 8개 업종은 내림세를 보였다. 전기전자 업종의 성장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614개사 중 분기순이익 흑자기업은 2분기 대비로는 56개사 감소했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19개사 증가했다. 반면, 적자기업은 2분기 대비 56곳 증가하나 작년에 비해서는 19개사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직전 분기보다는 둔화세가 나타난 모습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부진한 3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닥 12월 결산 상장사 1153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조87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2% 감소했다. 동일 기간 순이익도 4조3075억원으로 29.29% 줄

었으며, 매출액만 4.02%(198조8416억원) 소폭 증가했다.

3분기 개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순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1.70%, 순이익은 67.34% 감소했고, 매출액도 1.16% 줄어들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1153개사 중 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58.02%인 66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41개사(3.5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적자기업은 41.98%로 전년 동기 대비 41개사 늘어난 484개사로 집계됐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도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은 재무실적,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 우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해당 기업들의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3%, 1.62% 감소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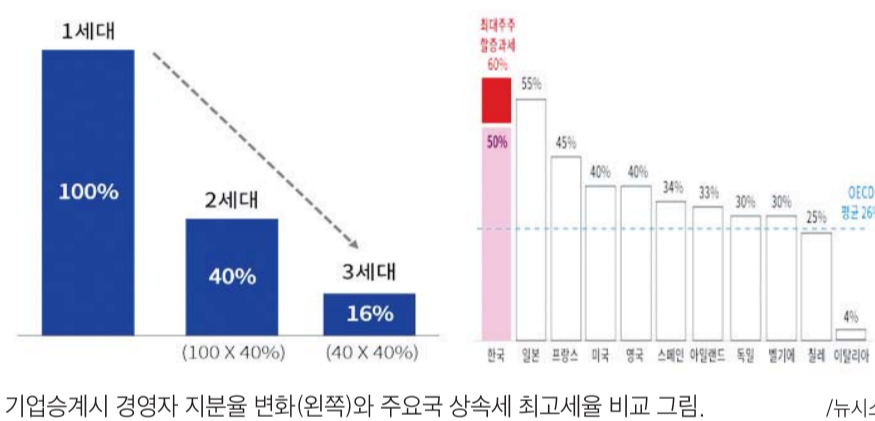
대한상의 “상속세 개편으로, 기업 지속 가능성 높아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개 이유’ 기업의 혁신 저해하는 주요 원인 G7 국가 비교해 과도한 세율 문제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

세율은 60%에 달한다.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추가부양 제약 등 경제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

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는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증시 안정화 위해 밸류업 펀드 2000억 투입”

금융위, 증시 상황 점검회의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필요시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 비율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증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증시 상황 점검 회의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환경의 변동성이 당분간 높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

되면서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 외 주요국은 미국 신청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유·불리 전망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주력수출산업 미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하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관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관 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해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해 주택 1채 이상 매입자 102만명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발표 2채 이상 다주택자 24.4만명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이 주택을 1채 이상 매입했다. 주택의 성별 소유현황은 최근 여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46.2%에 달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 동안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이었다.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었다. 무주택자였다가 매입한 사람은 71만9000명(2.1%)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에 비해 지난해 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늘어났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비중은 2022년도(85.8%)와 비교해 0.1%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소유가 840만9000명(53.8%), 여자 소유가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가 예년 대비 비중 증가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